

尹·김용현 나란히 탄핵심판 출석...헌재서 진실공방 벌이나

오늘 4차 변론기일 진행...포고령·비상입법기구 설치 쟁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 직접 질문 할지도 관전 포인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로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이들은 탄핵심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비상입법기구 구성 문건 작성자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통상 증인신문은 양측 법률대리인이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국회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된다.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권 관대행이 허가하면 가능하다.

헌재도 김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이 담긴 문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진술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고령 1호는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담고 있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금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21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직접 작성했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입법기구 문서(일명 쪽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문서로, 국회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의 창설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폐쇄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에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쪽지에 관해서도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진술은 상반되고 있다.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함참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쪽지 작성과 전달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질문에 "(문건을) 내가 작성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가물거물하다"고 대답을 흐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작성했고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검토와 승인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날 12월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말한 뒤 누군가가 쪽지를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초 조지호 전 경찰총장도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 비어있는 한 자리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尹 강제구인·관저 압수수색 또 실패

윤 시간끌기 작전에 끌려다녀 병원행 놓고 법무부와 갈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제차 나선데 이어 대통령 관저 등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매번 강제수사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 작전에 휘둘리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빈손수사'가 계속 이어져 검찰에 서둘러 이첩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의 병원행 고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노출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자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5시께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응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 중지했다"고 물

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그동안 여러차례 대통령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 내부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었다.

실질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이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별도 조사실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급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모르고 강제구인에 나서 수사외지·정보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현재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면서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강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5시 11분 전화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21일 오후 5시 11분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불가능' 주장 선관위 압수수색,尹 취임 후 165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165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은 2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고, 이 중 91.16%(165건)가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백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 36